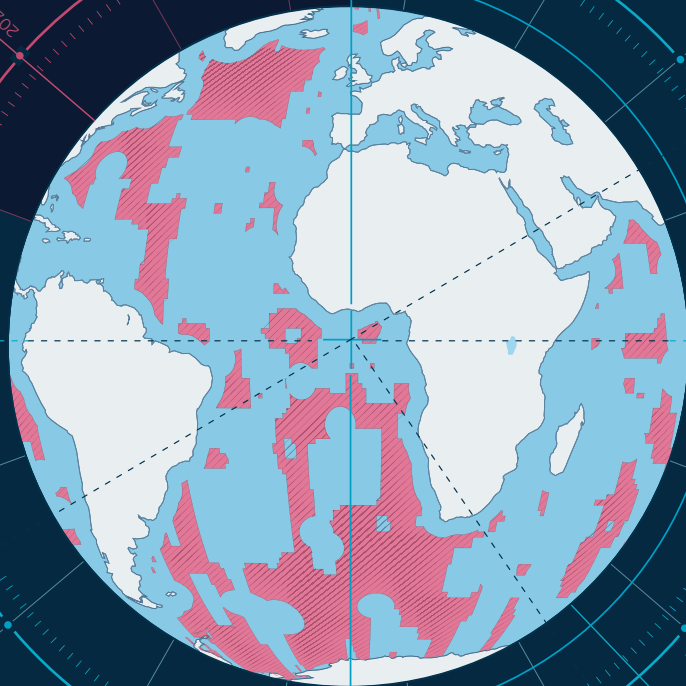


30X30

달성을 위한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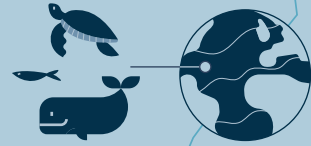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GREENPEACE

PROTECT
THE OC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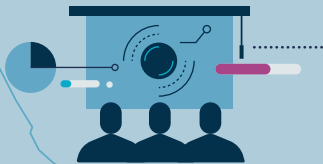
핵심 내용



글로벌 해양조약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보호 협약 중 하나이며, 공해 해양생물 보전에 초점을 둔 최초의 협약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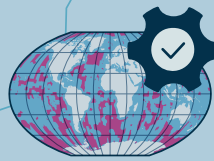


공해상에서 증대되는 생태적 압력을 새롭게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하는 일(30x30)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모든 국가가 2022년에 유엔에서 합의한 '30x30' 목표를 실현하려면, 해마다 1,100만km²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글로벌 해양조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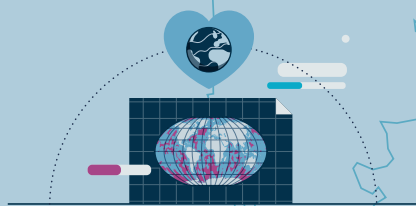


바다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30x30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2025년 6월에 열릴 유엔 오션 컨퍼런스(UNOC, 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함으로써 30x30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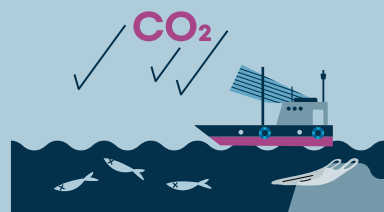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조약을 비준하면서 구축해야 할 다양한 조직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는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과학 및 기술 기구 등이 포함된다. 또 조약 이행에 착수할 준비위원회도 설립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조약의 비준과 동시에 제 1차 해양보호구역 제안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작업은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만일 지연될 경우 글로벌 해양조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어렵고 30x30 목표 달성 또한 위태로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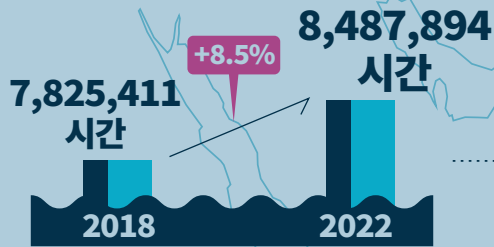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조약을 활용하여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정치적 절차를 설명한다. MPA 제안서를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것, 새로운 MPA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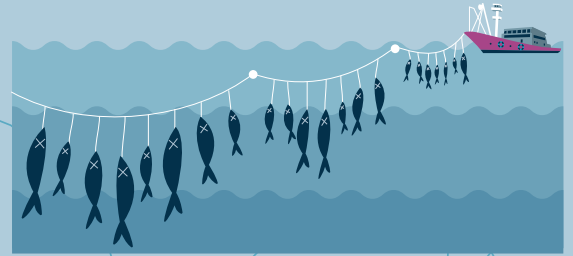
바다에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해양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위협에는 해수 산성화, 탈산소화 및 온난화,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오염, 해운, 산업적 규모의 어업, 그리고 최근 들어 부상한 심해채굴 문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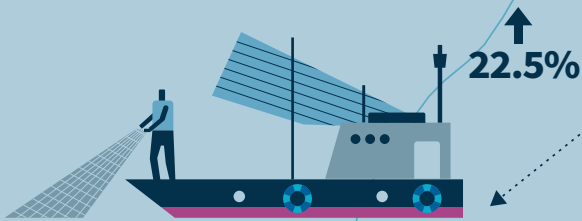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공해에서 벌어지는 산업적 어업 활동의 양상을 최근 5년 간의 자료로 새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해상 어업의 방대한 규모를 상세히 설명하고, 30x30 목표에 따라 보호할 것이 권장되는 수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어업 실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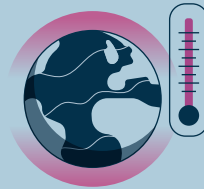
그린피스 글로벌 조사관들은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8~2022년 기간에 공해상의 조업 시간이 약 8.5%(662,483시간)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공해상에서 산업용 어선이 조업 활동을 벌인 시간은 총 8,487,894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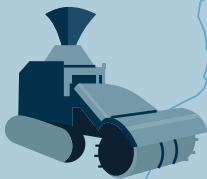
가장 많이 사용된 어구 유형은 연승, 오징어 채낚기, 트롤 어선이다. 특히 연승 어업은 세계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활동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연승 어업에서 사용하는 낚싯줄에는 수천 개의 미끼 바늘이 달려 있으며, 길이가 100km를 넘는 경우도 있다. 지나가는 경로의 해양생물을 닥치는 대로 낚기 때문에, 목표종 이외의 종을 잡는 혼획률이 매우 높은 파괴적 어업이다.



2019년의 그린피스 글로벌 보고서 '[30x30: 해양 보호를 위한 청사진\(A Blueprint for Ocean Protection\)](#)'에서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권장한 수역에서 2022년 어선들이 조업한 시간은 2,938,182시간으로, 2018년보다 22.5%(541,607시간) 증가했다.



2023년 해수 온도는 기록을 경신했다. 해수 온도 상승은 산성화 및 탈산소화와 더불어 바다의 화학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구의 온도와 기후를 조절하는 해양의 기능을 교란시킨다.



심해채굴은 최근 공해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정부가 심해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금지 조치)을 지지하고 있다. 이 위험한 산업이 바다의 건강에 또 다른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폐기물로 인한 바다 오염은 계속 악화돼,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박 운항은 공해상에서 일상적인 기름 및 소음 공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사고와 이로 인한 대규모 기름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표적인 세 수역, 즉 사르가소 해(Sargasso Sea), 엠퍼러 해산(Empire Seamounts), 사우스 태즈만 해(South Tasman Sea)/로드 하우 해대(海臺)(Lord Howe Rise)의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들 수역은 기후변화와 산업적 어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보고서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들 수역에 누적된 압박의 정도를 평가한 다음, 조약이 실현되면 이 수역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구상해 보았다.



각국 정부는 공해를 보호하고 30x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 대상인 생태적으로 민감한 수역에서 대규모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보호 조치가 지연되면 될수록 해양에 가해지는 압력은 커져 간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식량과 생계 수단을 건강한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십억 안구에게도 가해지게 된다.



요약

칼럼 로버트(Callum M. Roberts) 엑서터 대학교 해양 보존학 교수, 해양 생물학자, 해양학자 및 작가

2023년 3월, 유엔이 새로운 글로벌 해양조약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¹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은 약 20년에 걸친 준비 작업과 집중적인 국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다. 이는 국제 관계가 갈등으로 심하게 경색된 상황에서도 다자주의가 승리한 보기 드문 사례다. 또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여전히 전 세계가 뜻을 모을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조약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조약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거버넌스의 핵심 공백을 메워준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전 지구 차원의 거버넌스와 보호 조치가 부재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준다. 이 조약은 특히 한 국가 관할권인 200해리(약 370km) 경계 밖에 있는 국제수역, 즉 공해의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알려진 200해리 경계 밖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한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자연보호 의무에 따라 각국은 자국 경계 내의 자연을 보호하고 공해에서 자국민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해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수단이 없었으며, 공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규제 기관도 없었다. 대신 지역수산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s),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같은 지역 및 분야별 관리 기구가 바다에서의 인간 활동을 규제하는 거버넌스 기구 역할을 해 왔다. 이처럼 파편화된 거버넌스는 바다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전체 바다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공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결과는 재앙에 가깝다. 그간 공해는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안 해역에 만연해 있는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교적 안전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 연안의 자원이 감소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해는 당국의 감독이나 법적 제약을 피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가 되었다. 그 결과, 신대륙과 섬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육상의 야생 동식물을 살육했던 끔찍한 역사가 공해에서 재현되고 있다.



© Stephanie Keith / Greenpeace

배우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폰다(Jane Fonda)와 세네갈 커뮤니티 리더 안타 디우프(Anta Diouf)가 강력한 해양조약을 요구하는 그린피스 캠페인에 참여한 전 세계 5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레나 리(Rena Lee) 유엔 협상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¹ Officially known as the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참담한 피해의 생생한 증거와 공동의 노력으로 해양조약을 이끌어내다

공해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생물종들은 파괴적인 산업형 어업의 목표가 되거나 혼획의 제물로서 엄청난 속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 태평양 장수거북, 태평양 참다랑어, 장완홍상어는 3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개체수의 90% 이상이 감소했다. 해산의 깊은 경사면에 있는 서식지는 과학자나 탐험가들이 살펴보고 연구하기도 전에 전체가 긁혀 나가, 무엇이 사라졌는지는 잔해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 같은 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해 모니터링 방법이 개선되고, 과학적 접근 노력이 계속되면서, 충격적 훼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커졌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공동 노력이 지속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관련 국가들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해양조약의 길이 열린 것이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신속히 해양보호에 나서야한다

이번 그린피스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30x30 목표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역을 포함해 전 세계 바다에서 이뤄지는 어업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어업 활동으로 인한 이 같은 압력뿐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적인 압박까지 더해진다. 국제사회가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에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해양생태계는 계속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

지구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따른 해수 온난화, 탈산소화, 생산성 저하, 산성화
- 화학물질, 소음, 플라스틱 오염
- 증가하는 선박 운항

여기에 최근 심해채굴과 같은 활동이 더해지면서, 공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거버넌스 설립이 더욱 시급해졌다. 해양보호구역, 특히 모든 파괴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절대보호구역은 오늘날 해양이 맞닥뜨린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양보호구역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해양 생물의 회복과 번성을 돕고, 가속화하는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키워준다
- 기후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블루카본을 저장한다
-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식량과 생계를 보호한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도움이 되는 이유

공해의 생물다양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해양조약은 다음 네 가지 주요 의제를 포함한다

- 해양유전자원(MGR, Marine Genetic Resources)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 수단 (ABMT, Area-Based Management Tools)
-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 해양분야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CBTMT, Capacity 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조약의 첫 번째 부분은 조약 전반에 적용되는 목적, 원칙 및 정의를 명시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당사국들은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적 수단 및 프레임워크, 관련 글로벌, 지역, 하위 지역 및 부문별 주체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². 제7조는 조약의 적용에 있어 사전예방적 원칙과 오염자 부담 원칙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서문에서는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원주민의 기존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의 국제 보호구역 조항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는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글로벌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완성함에 있어 전제 조건이 된다. 이를 통해 생태계의 기능, 활력, 경이로움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넘겨줄 수 있다.

2023년 6월 19일 유엔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최종 문안이 공식 채택되었다. 이로써 조약 발효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조약은 60개국 이 비준, 승인, 또는 추인하고 120일이 지난 후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전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이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비준하는 데 12년이 걸렸다. 공해 보호는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하며, 효율적인 공해 보호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²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CTC/Ch_XXI_10.pdf



© POW / Greenpeace

글로벌 해양조약 협상을 위해 각국 대표가 뉴욕 유엔 본부에 모인 BBNJ 제5차 정부간 회의 전날, 그린피스는 뉴욕의 상징 브루클린 다리에 ‘해양보호를 실현하라’는 프로젝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각국은 30x30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비준을 마쳐야 한다

그린피스는 각국이 늦어도 2025년 6월 유엔 오션 컨퍼런스까지 조약을 발효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약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기울였던 것 이상의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시급히 조약을 발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30x30 목표다. 2030년까지 바다와 육지의 30%를 보호하겠다는 30x30 목표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설정되었으며 공해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해양에서 30% 지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0x30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이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시간은 없다.

2025년까지 조약을 비준할 것을 목표로 한다면, 30x30을 달성하고 공해에서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은 5년밖에 남지 않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어떤 보전 분야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대규모의 노력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이 조약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우리 세대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와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³.

³ Nature (2023) UN high seas treaty is a landmark – but science needs to fill the gaps - March 15, 2023.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3-00757-z>

해양보호구역 제안서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계획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조약 비준을 마치고, 집행기구를 설립하고, 이들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각국은 조약 비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호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승리가 결국 역사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남획과 파괴적인 어업, 오염과 지구환경 변화 등 건강한 바다를 짓누르는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에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30x30 목표에 따라 보호할 것이 권장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수역에서의 조업 시간은 2018~2022년 사이 22.5%나 증가했다⁴. 이는 당장 행동에 나서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머뭇거릴수록 공해가 맞닥뜨린 위험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각국은 조약 비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호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신속하게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승리가 결국 역사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공해에서의 약탈이 계속되고, 심해채굴과 같은 새로운 산업도 바다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수 온도는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해수면 상승과 빙하 감소는 가속화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재앙을 막으려면 시급히 움직여야 한다.



© Pierre Glez / Greenpeace

그린피스는 서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어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왔다.

과학 연구가 제안서의 근거를 제공한다

빠른 진행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첫 번째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가 일찌감치 제안되어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각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당사국 총회는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공해 생물다양성에 대해 수년 동안 과학적인 연구와 평가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축적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신속하게 대상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06년 그린피스 글로벌 보고서 ['회복을 위한 로드맵: 해양보호구역 글로벌 네트워크'](#)는 당시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공해에서 보호가 시급한 우선순위 수역을 파악하고, 국제 수역에서 강력한 보호구역 네트워크의 기초를 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물론, 많은 NGO와 과학자들이 이 분야를 빠르게 발전시켜, 2010년 생태생물학적중요해역(EBSA,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을 식별하고 그 범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현재까지 320개 이상의 EBSA의 범위가 선정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적합성 기준을 충족한다.

2019년 그린피스는 요크대학 및 옥스포드대학의 주요 연구진과 함께, 국제수역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담은 보고서 [30x30: 해양 보호를 위한 청사진\(A Blueprint for Ocean Protection\)](#)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최신 과학 기술에 힘입어 공해와 그곳에 사는 해양생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최첨단 네트워크 디자인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된 새 보호구역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후탄력적이고 상호 연결된 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바다 구석구석을 잇고 해수면부터 해저까지 도달하는 총체적 보호 방안의 윤곽을 제시한 것이다.

⁴ Greenpeace International (2019). 30x30 A Blueprint for Ocean Protection – How we can protect 30% of our oceans by 2030. <https://www.greenpeace.org/international/publication/21604/30x30-a-blueprint-for-ocean-protection/>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세 곳 사례 연구

이 보고서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유력한 후보지로 다음의 세 수역을 제안한다.

- 북태평양 엠퍼러 해산(Emperor Seamounts)
- 북대서양 사르가소 해(Sargasso Sea)
- 남반구 사우스 태즈만 해/로드 하우 해대(South Tasman Sea/Lord Howe Rise in the southern hemisphere)

**글로벌 해양조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유력한 후보지로 다음의 세 수역을
제안한다. 북태평양 엠퍼러 해산
(Emperor Seamounts),
북대서양 사르가소 해(Sargasso Sea),
남반구 사우스 태즈만 해/로드 하우 해대
(South Tasman Sea/Lord Howe
Rise in the southern hemisphere)**

이들 수역은 모두 해양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과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에도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어선의 조업활동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 변화뿐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산업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 수역들은 보전 관점에서 오랫동안 주목받고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 수역은 2006년과 2019년 발간된 그린피스 보고서에서도 보호구역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제안은 과학자, 환경 운동가, 고위 정치인,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 Paul Hilton / Greenpeace

해양보호구역 토대 마련은 지금 시작된다

이들 제안과 그 밖의 제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면, 조약의 집행 기능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당사국 총회 개최
- 과학 및 기술 기구, 기타 당사국 총회의 보조 기구 설립
- 클리어링 하우스 메커니즘 구축(국가 내 및 국가 간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 정보를 교환하며 통합하기 위한 글로벌 메커니즘과 인적 및 기술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역자 주)
- 사무국 설립

그린피스는 조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준비위원회 설립 제안을 지지한다.

준비위원회는 유엔의 정규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정부 간 회의의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주요 문서, 의제, 절차 규칙, 재정 규정 등의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조약과 그 하위 기구의 운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가 없다면 첫 번째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이어질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관련 항목을 정리하느라 조약 이행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을 앞두고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해양보호구역 확대뿐만이 아니다. 현재 심해는 채굴 장비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많은 정부가 심해채굴을 사전에 저지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 국가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심해채굴 산업을 지지하고 있다. 심해채굴의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세계 학계의 결론이다. 역사적인 글로벌 해양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이제 전 세계가 심해채굴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해양 파괴의 시대는 끝났고 해양 보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다.



사르가소해
사르가섬
해초 사이를
헤엄치는 물고기

© Shane Gross / Greenpeace



© Marten van Dijk / Greenpeace

그린피스 액티비스트들이 심해채굴 기업이 사용하는 선박에 '위험!'이라는 문구를 칠하며 채굴 중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레인보우워리어호는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서 심해채굴업계를 감시했다.

권고 사항

글로벌 해양조약은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조약이 이행되면 국제사회는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최소 30%의 해양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은 부족하고, 위협 요인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각국은 해양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계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행동을 서둘러야 한다.

- 2023년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최소 60개국이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은 구속력은 없지만, 비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조약 발효를 위한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 2025년 6월 유엔 오션 컨퍼런스(UN Oceans Conference)에서 조약이 발효되고 국제법으로 인정되려면 최소 60개국이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해양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는 세계 지도자들이 조약의 발효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
- 유엔은 2023년 말까지 준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절차 규칙, 재정 규정, 산하 기구의 규모와 위임 사항, 양식 등 여러 사항들이 제1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초기에 필요한 기본안 작성과 협의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없으면 첫 번째 당사국 총회와 이어질 2차 당사국 총회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약의 이행과 해양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30x30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작업을 미리 수행해 첫 번째 당사국 총회가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준비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의 필요 역량과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CBTT,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실무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조약이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과정은 조약 이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가 권리를 실현하고 스스로 미래의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개발, 이행,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할 것이다.
- 조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약의 당사국 총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준비위원회는 재정 관련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예산 확보를 시작해야 한다⁵.

- 각 국가, 지역 그룹, 그 외 기구는 조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글로벌 해양 프로그램이 4천만 유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선언을 해야 한다.
- 각국은 공해 해양보호구역 제안서 작성을 신속히 시작하여, 제1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적어도 3개의 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도적인 국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치적 지지를 조성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조약 비준 추진과 함께 진행하는 '트윈 트랙'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조약이 발효된 이후로 이 작업을 미루게 되면, 첫 번째 당사국 총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고 30x30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는 연구 지원부터 대중의 지지 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각국은 심해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해야 한다. 심해채굴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양립할 수 없다. 심해채굴이 야기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해양 보호구역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심해채굴이 시작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과 함께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심해저 채굴 중단에 관한 일반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2023년 8월 현재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20개국 이상이 심해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 또는 예방적 중단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해저기구에서 채굴 중단 조치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 Tui De Roy / Minden / naturepl.com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갈라파고스 바다사자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다.

⁵ IDDR (2023). Initial reflections to support rapid, effective and equitable implementation of the BBNJ Agreement. Policy Brief February 2023. <https://www.iddr.org/en/publications-and-events/policy-brief/initial-reflections-support-rapid-effective-and-equitable>



PROTECT
THE OCEANS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 보호 30X30 달성을 위한 로드맵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며, 육지와 해양을 포함한 지구의 생물이 서식하는 면적의 70%를 차지한다.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인 공해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공해의 생물은 인간이 유발한 파괴적인 개발활동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은 공해 보호 및 관리 방법을 개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2023년 3월, 마침내 유엔은 역사적인 글로벌 해양조약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최소 30%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강력한 도구다.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 시급하다. 이 보고서는 30x30 목표를 이루고 바다를 다시 생명이 풍부한 공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